

‘희망고문’ 그만... 개성·금강산 재개, 베트남發 훈풍 기대

2차 북미회담 확정에 기대감
대북제재완화 가능성에 들쭉
‘폐쇄 3년’ 개성공단 비대위
11일 여의도서 관련 세미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청신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분단 이후 남과 북이 함께 만든 유일한 ‘평화지대’ 역할을 해왔던 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발맞춰 진행될 대북제재 완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재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현대아산은 8~9일 1박2일간 금강산 현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기념행사에는 배국환 사장 등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창립 20주년의 상징성을 고려해 금강산행사를 추진하게 됐고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며 “현대아산의 남북경협 20년 역정을 되돌아보며, 사업정상화와 재도약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아산은 1998년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듬해 2월 현대그룹의 남북경협사업

개성공단 주요 추진 경과

2000년 8월 22일 현대-북한, 개성공업지구 개발합의서 체결	2009년 8월 20일 北, 12·1 조치 해제 통보
2002년 11월 20일 北,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10년 5월 24일 우리 정부, 5·24 조치 발표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2013년 4월 3일 北,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 실시,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
2004년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개사 선정, 계약 체결	4월 8일 北,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및 근로자 전원 철수 발표
12월 15일 개성공단 첫 생산품 출시	4월 26일 우리 정부,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귀환 결정 발표
2005년 9월 본단지 1차 입주기업 24개사 선정, 계약 체결	5월 3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귀환 완료, 잠정 폐쇄 상태 돌입
2006년 5월 31일 1단계 100만 평 토지조성공사 완료	8월 14일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 채택
2007년 6월 본단지 2차 입주기업 183개사 선정, 계약 체결	9월 16일 개성공단 재가동
10월 6일 1단계 기반시설 준공식 거행	9월 30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 구성 및 운영
2008년 12월 1일 北, 육로통행 제한 조치(12·1 조치) 실시	2016년 2월 10일 우리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발표
2009년 3월 北, 키리졸브 훈련 발미로 3차례에 걸친 통행차단 조치 실시	2월 11일 北,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그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

전문 계열사로 탄생한 이후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공단 건설, 개성 관광, 백두산 관광 등을 추진하며 남북경제협력의 선두해왔다. 지난해 12월 말 금강산을 취재차 다녀

온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호텔 등 모든 시설이 관광이 중단되 기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해보였다”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많이 띄었고, 당장 남북 관광객에게 예

전처럼 문을 연다고 해도 전혀 손색을 없을 정도였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개성공단은 오는 11일로 공장 폐쇄 3년째를 맞는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달 말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세기의 담판’을 벌이는 만큼 지난해 6월 만남때보다 더욱 진일보한 결과가 나올 것 이란 기대감에서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1순위는 개성공단이 될 것으로 보여 3년째 학습고대했던 ‘개성행’은 무난할 전망이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면 미국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간 철도연결을 우선적으로 제재에서 면제해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은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좀 늦어지더라도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방북하고 또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것”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는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 가동이 멈춘 후 지난달까지 총 7차례나 방북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번번히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비대위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방북 재신청을 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두 번째인 만큼 지난해보다는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길 모두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상황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직후 바로 방북할 수 있도록 방북 신청을 미리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공장 폐쇄 3년째인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세미나를 열고 추가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불씨가 살아난 한반도의 봄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직접 언급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면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만큼 국제 제재문제 등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양성준 기자 bada@metroseoul.co.kr



BNK경남은행
보이스피싱예방 감사장

BNK경남은행은 경남 양산시 평산동 지점에 근무하는 이성혜 대리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양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성혜 대리는 지난달 15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정기예금 일부를 해지한 후 3000만 원을 송금하려 한 노부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BNK경남은행 이성혜 대리(오른쪽)가 양산경찰서 이경동 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다.

/BNK경남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금융안정 저해”

한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상업은행 유동성 부족 발생 가능성
디지털발행 신중, 보완책 강구해야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예금 일부를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며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C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중앙은행과 개인의 직접적인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는 물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강화한다

국토정책위 분과위 간담회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개인 대상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CBDC를 발행하는 경우 CBDC와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간 경험 관계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 모형을 설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할 경우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유출에 따라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으로 지급준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대되면서 지급준비금 축소비용이 예금 축소비용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더라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했다.

다만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면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고 금융안정이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금융사, CEO·사외이사 활동내역 부실기재

금감원 125개사 중 12개사 ‘미흡’

금융사들의 절반 가량이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관리에 대해 공시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나 이사회의 활동내역에 대해선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임원별 결격사유나 자격요건의 경우 78개사가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부실하게 기재했다. 또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역시 65개사가 충족 여부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해선 무려

97개사가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사외이사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간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이다.

임원 퇴임사유·후임자 선출 항목은 30개사가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과 관련해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 후보군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59개사가 후보군 상세현황 및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누락하거나 구체성이 없었다.

금감원은 전체 세부 점검항목 28개 중 미흡이 13개 이상인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자산운용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가 각각 네 곳씩이며, 증권 2개사, 은행 1개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감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번째 국토계획평가로 ‘2030년 성추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분과위원들은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